'출산율 전국 1위' 황주홍 강진군수 인터뷰

"고용 늘리고 양육 지원 주효"

우리나라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마다 출산율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진군이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을 해결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강진군의 인구대책과 함께 내년 주요 사업들을 황주홍 강진군수로부터 들어본다.

-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자체의 힘은 군민들로부터 나옵니다. 군민은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이자, 모든 정책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군정목표의 하나로 '인구감소 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폈지요.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덕분입니다.

임산부에 의료비 등 지원

셋째아이땐 720만원 지급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강진군의 합계 출산율은 2.21명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 출산율 1.19명에 비해 2배에 육박한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추산한 통계학적 수치다.

-출산가족관리 등 구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말씀해주신다면?

▲임신에서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임부 등록을 통한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등록, 예방접종 등 종합적인 저출산 극복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관내 등록 임산부에 대해 1회당 2만원 이내, 3회까지 6만원의 초음파 검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죠. 또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임신 10개월째 임부에게 20만원의 출산준비금과 출산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양육비도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죠?

▲첫째 아이를 낳으면 한 달에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둘째는 한 달에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급합니다. 셋째의 경우 한 달에 35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18개월 후에는 100만원, 24개월째부터 다시 100만원, 30개월째부터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죠. 셋째 아이에게 모두 720만원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특히 셋째에게는 신생아 보험료를 월 3만원씩 5년간 지원, 10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은 연간 11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강진군의 인구감소 하한선을 4만명으로 유지하면서 내년 '인구감소율 0%'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귀농을 위해 정착금 제도를 만들고,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 임직원이 주소와 함께 자동차를 이전할 경우 상수도요금 1만8천원, 쓰레기봉투 비용 7천200원, 차량이전비 4만4천원 등 모두 6만9천200원을 지원합니다. 또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금으로 가구당 600만원, 도시민 귀농시 빈집보수 및 도배비용으로 500만원, 귀농인 정착금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말 현재 강진군의 인구는 4만893명이며, 군은 올해 인구감소율 목표를 0.5%로 정했다. 이어 내년 인구감소율을 0%로 상향조정한 것은 더 이상 강진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는 황 군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저출산 제도와 귀농제도 만으로는 인구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인구유출도 줄어들 것이고요.

▲외지 기업과 자본유치를 위해 모든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칠량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성전산단도 사업대상자를 물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 고부가가치 청자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군민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관내 기업인은 물론 향우들까지 십시일반 지역

귀농인 정착 최고 3천만원

'인구감소율 0%' 달성 총력

인재 육성기금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 현재 100억원이 넘는 기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지난 2일 망호 선착장에서 도암면과 가우도를 잇는 출렁다리 기공식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인구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총사업비 155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1년 11월 완공예정입니다. 이 출렁다리는 강진의 아름다움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진만 야경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룰 화려한 경관 조명과 다리 중간에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유리데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대구면 청자촌, 미항 마량항, 도암면 다산초당, 백련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체류형 관광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문화·관광 프로젝트는 '남도답사 1번지'로서 강진을 명성을 더욱 높이고, 인구정책에도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호주는 한여름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한 7일 호주 시드니 한 해변에 많은 피서객들이 나와 수영과 카약, 일광욕 등을 즐겼다. /연합뉴스

北 대응별 시나리오 최종 점검

보즈워스 오늘 방북…김정일 면담 여부 불투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8일 평양을 방문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방북에 앞서 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6자회담 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 대화의 의제와 대응방향을 최종 점검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이번 대화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대응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향후 6자회담 재개 방안과 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간 공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북·미대화의 큰 대원칙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비핵화 약속에 대해 재확인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선(先)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 9·19 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 밖의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포괄적 접근 또는 '그랜드바겐'(일괄타결)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측은 이 같은 방안의 기본 취지를 북한측에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기간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과 북·미 양자대화를 가질 가능성이 높지만 친서 소지여부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시 내년도 예산 2조8529억원 확정

예결위 33억여원 삭감

광주시 내년 예산이 2조8천529억여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2010년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당초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2조8천549억5천483만9천원에서 33억691만5천원을 삭감한 2조8천529억5천483만9천원을 확정했다.

예결위는 조형물 논란을 빚었던 100억원대 '광주천 인도교' 예산 20억원과 60억원대 '광주 역사 상징 조형물' 설치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천 인도교와 광주 역사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예결위는 또 상수도 검침 수탁사원들의 반발을 샀던 상수도사업본부 PDA 구입 예산 6천4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생활체육 운영비 2천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5천만원, 노인복지 종사자교육훈련비 2천만원, 학생결핵 검사비 4천500만원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시책 업무 추진비도 5% 일괄 삭감, 8천262만5천원을 줄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서구청 공무원, 정치자금 2,600만원 기탁

광주시 서구는 최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정치자금 2천600만원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치자금 기탁에는 전주언 서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250명이 참여했으며 기탁 된 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 등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서구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공직자가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다"며 "직원들의 정치자금 기탁이 우리나라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 기탁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